

[선진국 전략]

김성근

sungkeun.kim@miraesasset.com

조윤경

yoonykyung.joh@miraesasset.com

Global Equity Issues

트럼프 취임 후 정책 미리보기

-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이 예정. 당선 이후의 행보를 통해 향후 정책 방향 점검
- 취임일부터 행정명령을 통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 예상. 이민, 에너지 분야에 집중
- 1) 이민 정책 강화는 인플레이션 우려 자극 요인, 2) 천연가스 수출 분야 주목
- 외교 활동의 일환으로 관세를 적극 사용할 것을 시사. 다만 점진적 부과 가능성

트럼프 취임 후 행정명령 집행: 이민, 에너지에 집중될 전망

1월 20일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11월 대선 이후 트럼프의 행보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취임 직후 트럼프의 정책 방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 10주 동안의 기간 동안 트럼프의 행보와 발언을 참고하면 세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1)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한 이민, 에너지 분야 중심의 빠른 정책 집행, 2) 예산 조정을 활용한 정책 집행 방향, 3) 관세를 활용한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행정명령을 빠르게 내놓을 전망이다. 공화당 상원내 2인자인 Barrasso 의원은 취임 후 경제, 국경 안보(이민) 관련 행정명령이 '정신 없이 쏟아지며 충격과 공포를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지난 9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의 모임에서는 트럼프와 핵심 고문들이 100개의 행정명령을 검토했다.

과거 바이든 행정부도 취임 후 빠른 속도로 행정명령을 처리했다. 바이든은 임기동안 약 160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그 중 약 30개를 100일 이내에 처리했다. 초기 행정명령 중 1/3은 트럼프 1기에 발표된 조치들을 되돌리는 효과를 야기했다. 트럼프와 이견이 크게 갈렸던 이민, 환경, 경제에서의 조치를 되돌리는 한편 핵심 캠페인 주제였던 코로나 대응에 힘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트럼프도 바이든과 정책적 차이가 크고, 2024년 대선 캠페인의 핵심 주제였던 이민,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민 분야에 먼저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트럼프의 핵심 아군이자 이민 담당 고문 Stephen Miller에 의하면 이민 정책부터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팬데믹 시절 활용했던 Title 42를 부활시키는 제안도 나왔는데, 팬데믹을 이유로 난민 신청할 기회도 주어지기 전에 국경 지대에서 이민자들을 빠르게 추방시키는 조치로 활용됐다. 이를 활용해 2020부터 2023년까지 2.8백만명 이상의 이민자들이 추방됐다. 다른 제안으로는 국경 장벽을 완성시키고 주와 국경 지차체 인원들도 국경 경비 업무에 투입시키는 방안도 제시됐다. 바이든도 트럼프 1기 이민 정책을 대부분 되돌렸는데 트럼프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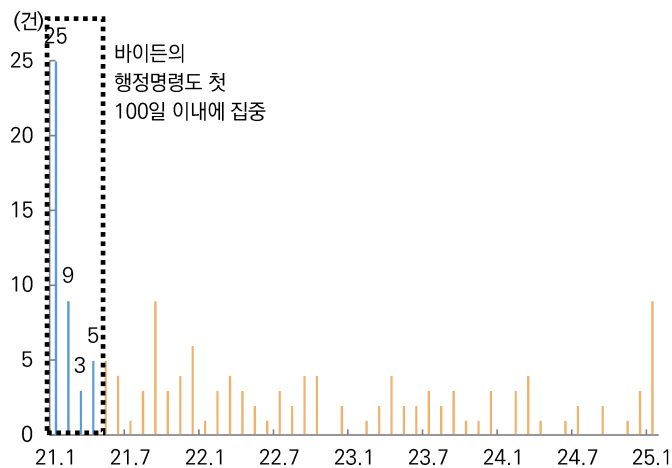
또한 지난 의회에서 국경과 이민 관련 협상을 이끌었던 Lankford 상원의원도 우선적으로 약 백만명의 이주민들에 대한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가장 최근에 미국으로 진입했거나 범죄 이력 보유 및 재판부에서 미국내 거주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은 인원들이다.

표 1. 11월 대선 후 트럼프 당선인의 주요 발언 및 행동

일자	분야	발언 및 행동
11.14	외교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회동. 당선 이후 첫번째 해외 정상과 만남.
11.25	관세 부과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에 서명할 것."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의) 추가 관세들에 더해 10%의 추가관세를 매길 것"
11.29	외교	트루도 캐나다 총리와 회동. 당선 이후 G7 지도자와 첫번째 만남
12.3	경제 안보	"US스틸이 외국 기업, 이번 경우 일본제철에 인수되는 것에 전적으로 반대"
12.7	외교	노르드담 대성당 재개관식 참석 차 프랑스 방문. 이는 당선 후 첫번째 외국 방문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과 3자회담을 가짐
12.8	방위비, 이민	당선 후 언론과의 첫 인터뷰(NBC) "그들(유럽 국가들)이 청구서를 제대로 지불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토에 남을 것" "불법 체류자 대규모 추방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선, 우리는 그들에게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고, 범죄자들부터 시작할 것"
12.10	외교	"지난번 위대한 캐나다주 트뤼도 주지사와의 만남은 즐거웠다."
12.12	국내 정책 (감세, 에너지, 암호화폐, AI)	시사주간지 TIME의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뉴욕 증권거래소 벨 타종 및 연설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엄청난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미국만큼 석유와 천연가스를 보유한 나라는 없다..생산량 1위를 넘어설 것" "우리는 암호화폐로 엄청난 일을 해낼 것.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고, 선두에 서고 싶기 때문" "인공지능(AI) 분야에서 앞서나갈 것. 이를 위해서는 많은 전력을 생산할 필요"
12.16	틱톡	추 쇼우즈 틱톡 CEO와 면담. 직전 기자회견에서 틱톡 퇴출을 막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들여다보겠다...난 틱톡에 따뜻한 감정을 갖고 있다."라고 답변
12.20	관세 부과	"엄청난 미국의 대EU 무역적자를 보상해주기 위해 EU가 미국의 석유와 가스를 대규모로 구매해야한다고 유럽연합에 얘기했다. 불응할 경우 관세를 부과하겠다"
12.20	국내 정책	"의회는 부채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2029년까지 연장할 필요"
12.22	외교	"파나마 운하를 완전히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할 것"
1.7	외교, 방위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두번째 기자회견 진행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확보를 위해 경제적 압력과 군사 조치의 사용을 배제하지 않을 것." "취임 첫날 연안 시추 금지 조치를) 취소할 것" "우리는 어떤 풍력 발전소도 지어지지 않는 정책을 갖게 될 것" "나토는 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갖춰야 할 것"
1.8	국내 정책	카터 전 대통령 조문 차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상원 의원들과 주요 입법 전략을 논의. 회의 후 "하나의 법안 또는 두 개의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방법은 상관없다. 결과는 동일할 것"이라고 발언
1.10	국내 정책	셋다운 이슈 당시 반대표를 행사한 Freedom Caucus 의원들을 플로리다 저택으로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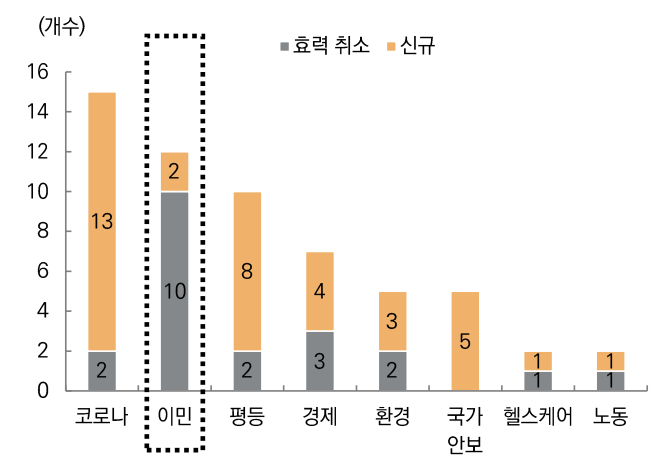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Truth Socia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취임 후 행정명령을 활용한 강한 정책 드라이브 예상



자료: Ballotpedi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바이든의 첫 100일 동안의 분야별 행정명령



자료: CNN,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예산 조정안 형태는 아직 미정: 하원 통합이 최대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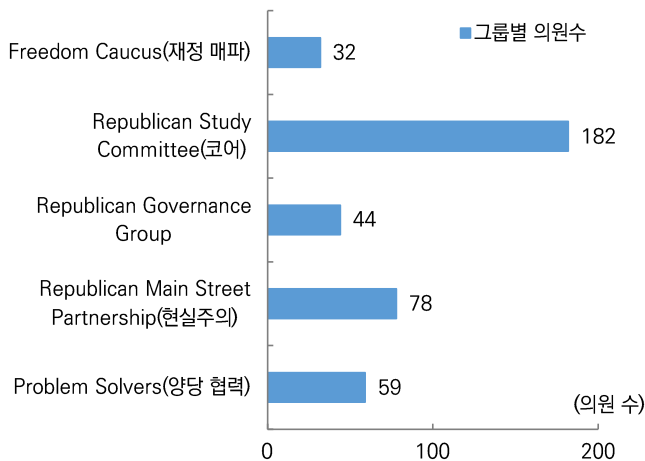
Freedom Caucus 소속 하원의원들을 포섭하려는 노력도 돋보였다. 지난 10일에는 저택으로 초대해 단합을 도모하는 목적의 저녁 모임을 가졌다. 트럼프가 해당 의원들에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핵심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의원들의 지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하원내 의석수차가 미미한데다 Freedom Caucus 의원들은 공화당 리더십과의 잦은 충돌을 일으킨 이력이 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2월말 예산안 통과에도 반대표를 던지는 한편, 존슨 하원의원장의 선출 표결에서도 반발심을 드러냈다. 감세 정책을 집행하고 싶다면 수입 감소 폭에 상응하는 지출 감소가 뒤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영향이다. 앞으로 트럼프의 핵심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정(budget reconciliation)을 활용해야 하는데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약 집행과 관련한 상하원의 의견차도 부각됐다. 상원은 이민, 에너지를 먼저 다루고, 의견이 갈리는 감세는 나중에 다루는 Two-Track 전략을 선호한다. 반면 하원은 이민, 에너지, 감세 등 핵심 정책을 한번에 처리하는 One-Bill 접근을 선호한다. Two-Track의 경우 감세를 통과시키는데 해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판단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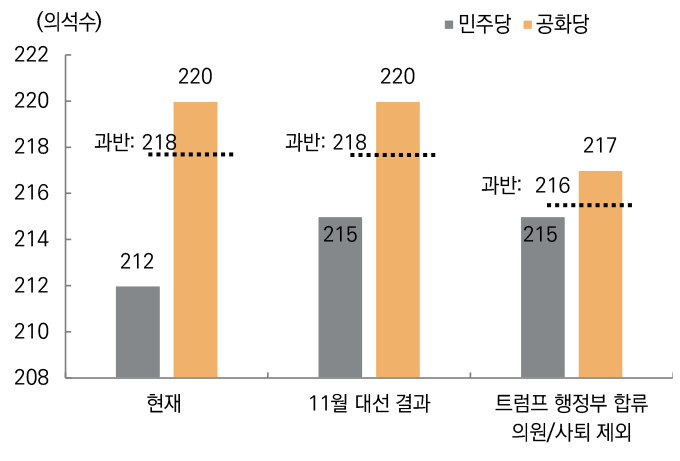
트럼프는 처음에는 하원의 의견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나중에는 어느 방향이든 상관 없다는 스탠스로 전환했다. 존슨 하원의원장은 이르면 4월 3일, 늦어도 5월 26일까지는 최종 예산조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지만 Freedom Caucus 의원들을 포섭하는데 실패한다면 정책 집행 속도는 예상보다 더디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의원들의 요구 사항에 맞추기 위해 계획보다 정책 규모가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3. 하원내 공화당 파벌들



자료: Fivethirtyeigh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매우 근소한 의석수 차이로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자료: NY Times, Politico,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관세를 외교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 다만 관세는 점진적으로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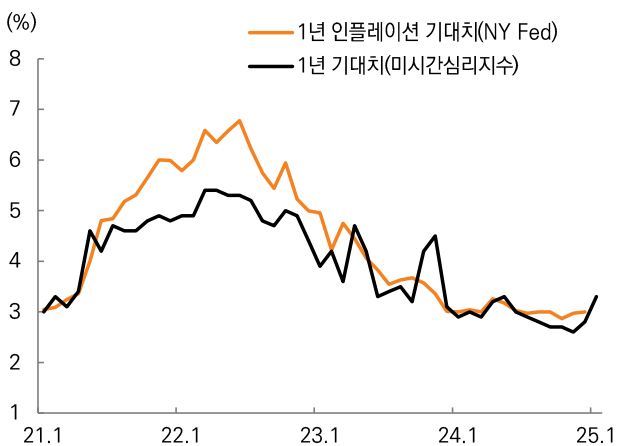
우선 관세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취임 후 캐나다, 멕시코, EU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율을 10% 상향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 고문들을 인용해 공약에서 제시한 것과는 달리 관세를 특정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를 냈을 때 즉각 반박하기도 했다. 관세의 형식, 범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지만 관세 부과를 사용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 확보 관련 언행에서는 앞으로 미국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 등 경제적 압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시사했다. 1979년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에게 돌려준 협약을 비판하면서 운영권을 다시 미국이 가지고 오거나 미국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덴마크에 구매 의사를 밝히는 한편, 불응할 경우에는 관세 부과로 위협하는 행위를 보였다.

다만 관세를 매기더라도 금융 시장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은 형태로 집행할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트럼프의 경제팀이 점진적인 관세 부과를 검토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재무장관 후보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국가경제위원회(NEC)장으로 지명된 케빈 하셋(Kevin Hassett), 경제자문 위원회(Council of Economic Advisors, CEA)장 지명자인 스텐판 미란(Stephen Miran)은 인플레이션 자극을 피하면서 상대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는 관세 정책을 구상 중이다. 일례로 한달에 2%에서 5%씩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높이는 형식이 검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미국 소비자들을 의식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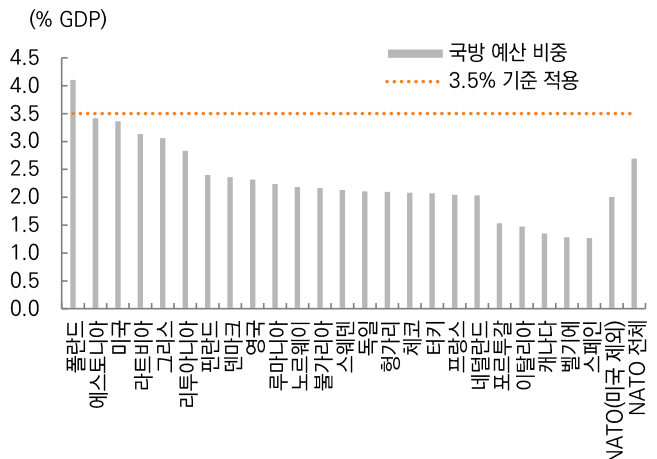
방위비에 대해서도 압력을 높였다. 대선 이전에는 NATO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을 GDP의 2%에서 3%로의 상향을 요구했는데, 최근에는 5%까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폴란드도 해당 발언에 대해 적극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럽 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방산 투자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미국도 국방비가 GDP의 5% 레벨에는 못미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5%까지 높아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협상을 통해 3.5%까지 인상하는 흐름은 가능하다. 실제로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달 EU 의원들에게 나토의 최종 목표는 GDP의 3.6~3.7% 수준이 될 전망이고, 복지 지출을 줄이고 방산에 투자할 것을 촉구했다.

그림 5. 12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가격 인상을 경계하는 소비자



자료: NY FED, CEIC,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NATO 회원국들의 국방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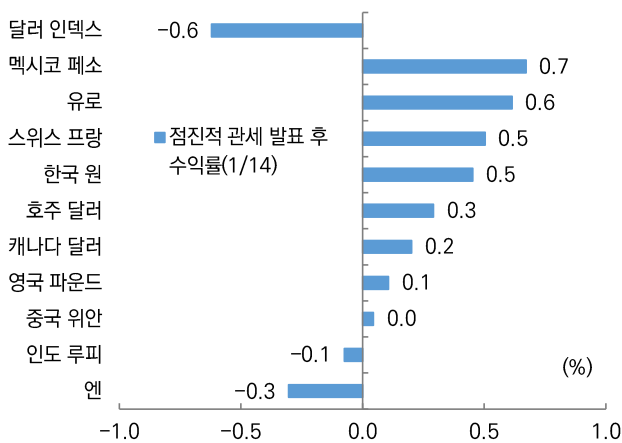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종합: 점진적 관세는 주식 시장에 긍정적, 이민 정책은 부정적

대선 이후 트럼프가 보인 행보를 종합해 보면 1) 취임 후 이민, 에너지 관련 행정명령의 빠른 집행, 2) 관세는 부과하지만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점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공약 실행에 있어 핵심 변수인 Freedom Caucus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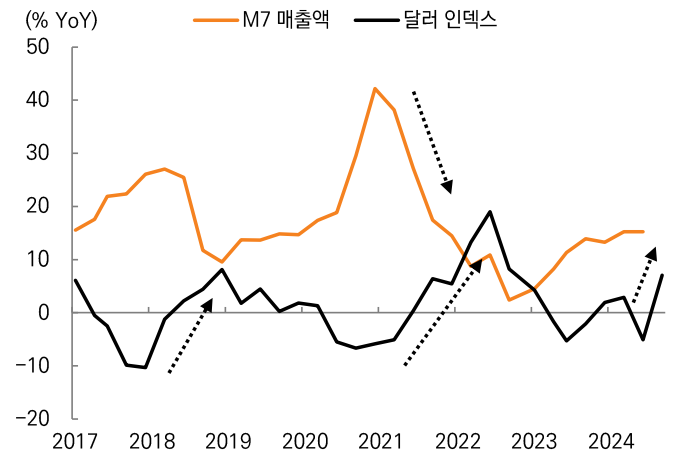
관세 관련 방향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반면, 취임 후 이민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취임 후 행정명령으로만 이민자 수를 줄일 있고, 향후 예산 조정안에서는 미국내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조치도 시행돼 이민 정책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Two-Track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민 정책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 노동 시장내 공급이 위축되며 임금을 자극하는 우려가 확산될 수 있다.

그림 7. 점진적 관세 발표 후 달러 약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달러 강세는 빅테크 실적에 부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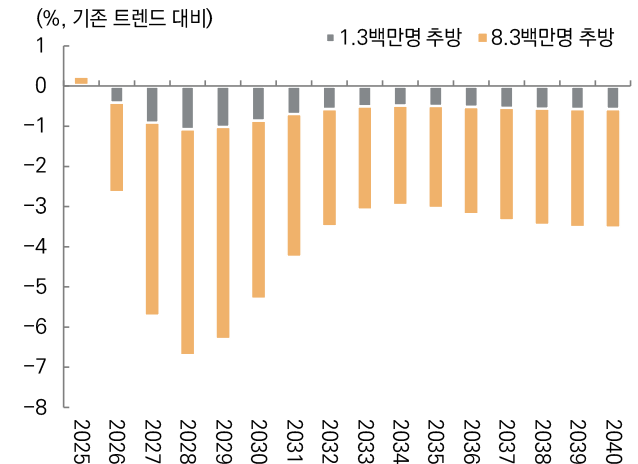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트럼프 당선 이후 높아진 무역정책 불확실성



주: 각종 언론에서 다루는 무역 정책 관련 키워드의 빈도수, 전망 불일치 정도를 측정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트럼프 이민 정책의 여파로 미국내 노동 공급 감소 예상



자료: PH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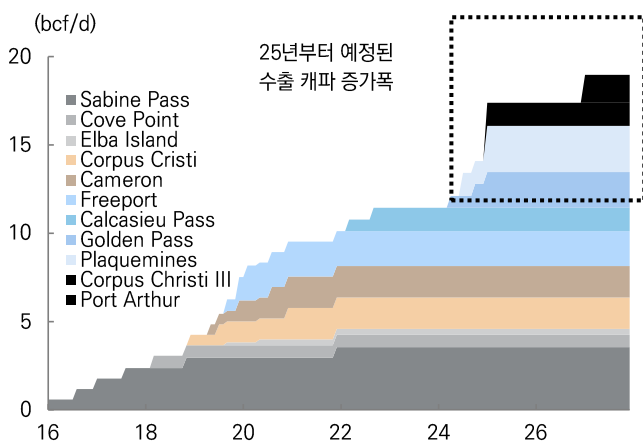
반면 점진적인 관세 부과는 달러 약세를 유발하고, 인플레이션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실제로 점진적 관세 보도가 나온 이후 달러는 미국의 주요 무역국 통화 대비 약세를 보였다. 달러 강세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부정적이지만, 이와 같은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 후 확대됐던 무역 정책 불확실성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정책도 빠른 변화 예상: 천연가스 수출 증가 기대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 에너지 분야 행정명령을 즉시 되돌리겠다고 발언했다. 일례로 미국 연안에서의 원유 생산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트럼프는 즉각 반발하며 취임 즉시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외에도 바이든 행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신규 수출 LNG 프로젝트 허가 중단 조치를 되돌리겠다는 방침이다. 미국내 원유, 천연가스, 전력 생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National Energy Council)의 구성도 예상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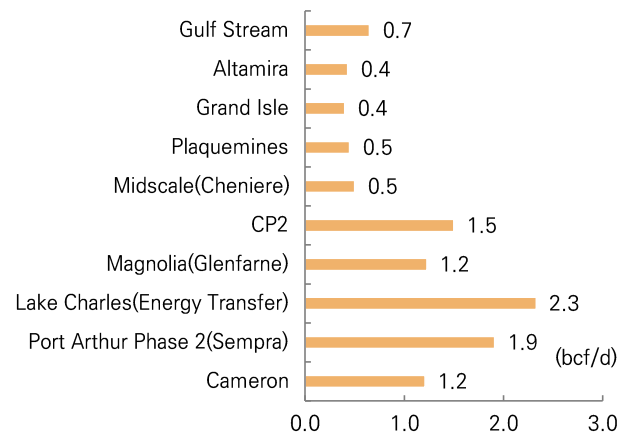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추진으로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다. EU에 대한 트럼프의 핵심 요구 사항은 미국의 원유, 천연가스 수입을 늘려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으로, 향후 협상 과정에서 EU의 천연가스 수입 증가를 기대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수출 캐파도 큰 폭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24년에는 바이든이 추가 천연가스 수출 프로젝트 승인을 정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트럼프는 이를 되돌리겠다고 공언했다.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10.6 bcf/d 이상의 수출 캐파가 영향을 받았는데, 이는 현재 미국 수출 캐파에 상응하는 수준이다. 천연가스 수출 증가에 따라 미드스트림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생산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

그림 11.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 캐파시트



자료: EIA,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2. 바이든의 행정명령으로 정지된 수출 프로젝트의 규모



자료: OGI, Center for LN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3. 트럼프 2기 내각에 지명된 주요 인사: 붉은색으로 표기된 인사에 특히 주목

후보자	지위	정책 스탠스	후보자	지위	정책 스탠스
JD Vance	부통령 (Vice President)	- 2016년 미국 노동 계층의 생활이 담긴 Hillbilly Elegy라는 베스트셀러 소설로 유명세를 획득 - 2020년 대선부터 트럼프 MAGA 운동에 동참 - 오하이오주 공화당 상원 의원(22년 당선)	Susan Wiles	비서실장 (White House Chief of Staff)	- 과거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당선 보조 - 2024 트럼프 캠페인 총괄하며 트럼프 당선에 큰 공헌 - 공화당 캠페인 운영 경력은 풍부하나 정부 경험은 부재
Scott Bessent	재무부 (Secretary of the Treasury)	- 관세 부과는 협상 카드의 역할, IRA 반대 - 미국 부채 레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 예산 삭감 선호 - Key Square Group 설립자	Stephen Miller	정책 담당 부비서실장 (Deputy Chief of Staff)	- 트럼프 핵심 고문으로 이민에 강경한 입장 - 불법 이민자 강제 추방, 신규 이민 제한 주장 - 트럼프 1기 백악관 선임 고문
Marco Rubio	국무부 (Secretary of State)	중국·이민 관련 강경한 입장 - 러-우 전쟁 종식 지지 - 플로리다 상원의원	Thomas Homan	국경 정책 총괄 (Immigration Czar)	- 불법체류 이민 관련 강경한 스탠스 - 과거 이민 관련 가족 분리 정책 수행의 중추적 역할 수행 - 이민 및 세관 집행국 대행 국장(트럼프 1기)
Pete Hegseth	국방부 (Secretary of Defense)	- 폭스 뉴스 국방 채널 공동 사회자 - 상원 인준 가능성 낮다고 평가(경력 부족)	Michael Waltz	국가 안보 보좌관 (National Security Advisor)	- 중국에 강경한 입장 - 미국의 전쟁 지원 지출 재검토 추진 - 나토 동맹국 방위비 분담 요구 - 미국 연방 하원의원, 미국 출신
Pam Bondi	법무부 (Attorney General)	- 트럼프 1기 당시 오피오이드 및 약물 남용 위원회 근무 - 트럼프 첫 탄핵 재판에서 대리인 역할 수행 - 전 플로리다 주 검찰총장	Elise Stefanik	UN 대사 (U.N. Ambassador)	- 이스라엘의 확고한 지지자 - UN이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상 미국의 UN 지원 중단을 지지 - 현 뉴욕 하원의원
Doug Burgum	내무부 (Secretary of the Interior)	- 에너지 분야에서의 규제 완화 지지 - AI,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전력 생산은 필수적이라는 입장 - 국가 에너지 위원회(NEC) 의장직 수행 예정 - 현 노스다코타 주지사	Matt Whitaker	NATO 대사 (Ambassador to NATO)	- 트럼프 연방 형사 사건 관련 비판 지속해 온 인물 - 지난 4년 동안 법무부의 정치화 비난 지속 - 전 법무장관 권한 대행
Brooke Rollins	농무부 (Secretary of Agriculture)	- 트럼프 1기 미국 국내정책위원장 역임 -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Heritage Foundation)의 라이벌격 회장	John Ratcliffe	CIA 국장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친 트럼프파 성향 보유. 트럼프 1기 중 정보를 정치화 시켰다는 비판에 직면 - 중국이 미국의 이익에 가장 큰 위협이라 주장 - 전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
Howard Lutnick	상무부 (Secretary of Commerce)	- Cantor Fitzgerald CEO - 중국 수출 규제, 무역 정책 관할 - 광범위한 관세 부과에 긍정적 - 한편으로는 관세의 '협상칩'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	Robert F. Kennedy Jr	보건복지부 (Health and Human Services)	- 코로나 백신과 아동 예방 접종에 대한 비판 지속 - 백신 반대 단체 'Children's Health Defense' 설립 - 2024 미국 대선 무소속 후보 - 상원 인준 통과 불확실
Sean Duffy	교통부 (Secretary of Labor)	- 의회 재직 당시 재정 책임, 경제 성장, 농촌 개발 위한 활동 진행 - 전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Mehmet Oz	CMS 국장 (Medicare and Medicaid)	- 팬데믹 중 의료계의 반발에 직면 - 메디케이드, 식량 지원, 기타 정부 복지 프로그램 축소 필요 주장 - 외과 의사 출신의 TV 쇼 진행자. 22년 상원의원 후보에 출마했으나 낙선
Kristi Noem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 이민에 강경한 입장 - 국경 구역에 철조망 설치 결정 -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반대 입장 - 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	Lee Zeldin	환경보호국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기조 옹호 - 트럼프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에 찬성. IRA 반대 - 전 뉴욕주 공화당 하원의원
Lori Chavez-DeRemer	노동부 (Secretary of Labor)	- 'Protecting the Right to Organize(PRO) Act' 공동 발의 - 노동조합에 친화적인 공화당원 중 한 명 - 현 오레건주 공화당 하원의원	Linda McMahon	교육부 (Secretary of Education)	- '학교 선택'에 대한 지지 표명 - 트럼프 슈퍼 PAC America First Action 의장으로 트럼프를 위한 자금 제공 지속 - 트럼프 1기 미국 중소기업청장 역임
Chris Wright	에너지부 (Energy)	- 탈 화석 연료에 반대 입장 표명 - 국가 에너지 위원회 활동 예정 - Oklo(SMR 스타트업) 이사 - Liberty Energy(원유 서비스 기업) CEO	Russell Vought	예산관리실장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의 'Project 2025'에서 핵심 역할 수행 - 트럼프 1기 예산관리국 부국장 출신

자료: 언론 종합,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